

518개 국가사무 지방으로... 文정부 지방분권 본격화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마련

중앙행정기관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0일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고 이후 자치분권위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부처별로는 해양수산부 사무 119개가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비롯해 국토교통부(92개), 환경부(61개), 여성가족부(53개), 고용노동부(34개), 산림청(24개) 등 순으로 이양되는 사무가 많다.

인·허가권 130개 가장 많아
35개 항만 개발권 시·도로
부처·지자체 협업 의무화도

유형별로는 인·허가권이 130개로 가장 많고 신고·등록(97개), 검사·명령(131개) 등이다.

법 제정안에는 우선 전국 60개 항만 중 지방관리 구역항 17곳과 지방관리 연안항 18곳 등 35개항의 항만 관련 사무를 해양수산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100만㎡ 이상 물류단지 지정·고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생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과 확인 사무 53개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졌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 등록 관련 사무와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 3천kW 이하) 허가·관리·감독 사무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산업부에서 시·도로 이양된다. 횡단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주차금지장소 지정 등은 경찰청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각 시군으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특색과 주민 의견을 고려해



손 맞잡은 원내대표들 30일 오전 국회 의장전집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인일정으로 불참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산림조합 설립 및 감독(산림청), 새마을금고 설립 및 감독(행정안전부) 사무도 지방으로 권한이 넘어간다.

특히, 법에는 지방 이양에 따른 중앙·지방 간 업무단절 우려 해소를 위해 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업 의무화 규정도 포함됐다. 또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데 드는 인력과 재정비용을 조사하고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한다. 자치분권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 법제

정을 마칠 계획이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단체장·지역위원장 잡아라”

민주 당권주자들 지지 확보 총력
'눈치 보기' '줄 세우기' 논란도
“호남 공약 강력 요구” 목소리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경선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 단체장 및 지역위원장의 지지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경선은 대의원(45%)과 관리당원(40%)의 반영 비율이 역대 최대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장과 지역위원장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호남의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권 주자들은 모든 인연을 총동원, 호남 지역위원장과 단체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또 각 후보 캠프에서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측에 '지원 인력을 파견해 줄 것'을 읍소하고 있다. 인력 지원은 곧바로 지지로 이어지면서 경선 초반 세 확장에 도움

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위원장은 신중 모드다. 어느 한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불리 특정 후보 지지에 나섰다가 차기 총선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은 복수의 캠프에 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양다리 작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줄 세우기'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지역 모 지역위원장은 “세 명의 당권 주자와 모두 개인적 인연이 있는데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일단 판세를 지켜보며 지지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단체장들은 비교적 자유롭다. 이번에 선출되는 대표가 임기가 2년이라는 점에서 차기 지방선거 공천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위원장이 특정 후보 지지에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

이다. 벌써 광주·전남지역 일부 단체장들은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체장들은 지방선거 기간동안 자신을 지지했던 관리당원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이번 당권 경쟁에서 호남지역 지역위원장과 단체장들이 대표 후보들에게 호남 관련 공약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후보 토론회를 통해 '누가 호남 공약을 충실하게 내놓느냐'를 놓고 평가를 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배심원제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지역위원장과 단체장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상당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호남 정치권이 민주당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당 대표 주자들에게 호남 공약을 보다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전대서도 '친문 위력' 발휘되나

당권주자들 '문심 경쟁' 구도
초반 판세·분위기 좌우
이재명 거취 놓고 3인 3색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초반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이들은 문 대통령 강성 지지층인데 대부분 당비를 내는 관리당원으로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한다는 점에서 초반 판세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다만 드루킹 사건 등으로 예전같은 공격성은 보이지 않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특정 후보 불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 문제를 놓고 당권주자들은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후보는 지

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슈들이 증폭돼 당과 대통령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고집지만 이 시점에서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는 김 후보가 '친문' 지지층의 표심을 불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친문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라는 것이다. 김 후보(경기수원무)는 지난 6·13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이재명 지사와 경쟁했던 친문 전혜철 의원을 도운 바 있다. 현재 전 의원은 김 후보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송영길 후보는 30일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제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정중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쟁자인 김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송 후보는 “대표가 된다면 이 지사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당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후보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잘 모른다. 전당대회와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리 총리’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한 성깔하는 이 후보조차 논란을 일으키기 보다 아예 잘 모른다고 피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당권 주자들의 행보는 전대 자체가 '문심 경쟁' 구도로 흐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의원과 관리당원 대부분이 문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만들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위 당권 주자들이 강력한 비전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문심에 기대거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역극 지지층들의 지나친 참여가 민주당과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HNT 하나투어

몽골 오직 여름에만 만날 수 있어!

8월 10일(금), 14일(화), 18일(토) 3박5일

한정특가
1,099,000원

울란바타르/테를지 5일

현지자비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8월, 14일, 18일 단2날짜 #게르2박

테를지 초원 승마체험
1,599,000원~

울란바타르/테를지 5일

현지자비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몽골전통공연

하나팩

하노이 단 1회 추석연휴 특별기!

9월 22일(토) 3박5일

발마사지+4성급호텔
1,290,000원~

하노이/하롱베이/엔뜨 5일

현지자비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비경관관 #엔뜨 케이블카 탑승

럭셔리 런치크루즈+5성급호텔
1,590,000원~

하노이/하롱베이/엔뜨 5일

현지자비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하롱파크 즐기기 #전신마사지 1시간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인정보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여행상품] 여행상품의 사천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별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편 포함 상품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재산관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광주충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권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